

광주시, 상임위 삭감 예산 되살리기 안간힘

오늘 예산안 심사 ... 윤시장 시정철학 관련 예산 부활 총력전

교육청 예산 51억 삭감, 누리과정 120억은 원안대로 되살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연기됐던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부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윤장현 광주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각 실·국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 3조8000억원 가운데 102억원이 상임위 예산

심에서 삭감됐다.

이 가운데 윤 시장의 민선 6기 시정철학이 담긴 중국과 친해지기사업과 직접 민주제적 시민참여 활성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내년 초 예정된 수영다이빙팀 창단비 4억4000만원과 김치축제 예산 15억5000만원이 각각 전액 삭감됐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적자 보전액 10억원도 삭감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실·국을 중심으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예산 부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전남 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심사에서 교원전형 위탁법인 인센티브, 예비혁신학교 지원비 등 9건 51억여원을 삭감했다.

시학법인의 교원 인사권까지 관여해 사학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받아 온 교원 전형 위탁법인 인센티브 등 1억4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임해수련원 신축비품비와 신축비(30억원), 학교협 호스팅 구축비(15억원), 교원 해외연수비 등을 깎았다.

일부 교육단체가 반발해온 혁신학교 지원비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1억원 중 5000만원이 부활했다.

정부와 갈등 여파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누리과정 사업비 120억원은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되살아났다.

증액도 적지 않아 무려 31건, 58억9000여만원이 늘었다.

시 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학생 1인 당 200원에서 130원으로 줄여 편성한 친환경 식재료비는 30억8천여만원이 증액돼 지난해 수준으로 단가를 맞추도록 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 PC지원비 3억원, 도서확보비, 학교 CC-TV확충비 등도 늘었다. 학생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하고, 시설확충 등에 대한 예산을 줄였다는 게 예결위원들의 설명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1조692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국회 남북관계 발전특위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먼저 결의안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9개월이 경과하는 현재에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북한의 군사적 행동 등으로 인해 지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남북자 귀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식량 등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없는 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회도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결의했다.

특위 원혜영 위원장은 "남북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에는 여야가 없다"며 "정부가 국회 결의를 무겁게 받아 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위는 결의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의결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北 "인권 결의안 수용 못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서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가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유엔 사무국은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간) 자성남 북한 대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과 첨부 문서를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람시켜 달라는 북한 측 요청에 따라 1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들 문서는 북한이 이미 밝힌 입장을 담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자 대사 명의의 서한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북한 사회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맞춰 유엔연합(UN)과 일본이 북한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은 새로운 핵무기 실험을 자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결의에 상관없이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

자 대사의 서한에 첨부된 문서는 결의안 채택 직후 나온 북한 외무성 성명이다. 이 성명은 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조합장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광산구 KT우산 사옥에서 내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광산구 선관위 양현권 위원장과, 9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광산구선관위 제공>

"담뱃값 세수, 재산세보다 많다"

가격 인상은 결국 서민증세"

한국납세자 연맹 주장

2일 국회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안을 통과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부당한 서민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서민 증세가 정부 추산 2조8000억원에 이르는데, 내년 담뱃값 세수는 10조원 정도로 2012년 거든 재산세 9조6000억원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맹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21조원인데 세수는 1조원도 안돼 실효세율이 4.6%에 그친다"며 "부동산 임대소득만 제대로 과세해도 담뱃세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예상액이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2조8천억원과 비슷한 2조9133억원이라는 점을 들며 "가난한 일반 국민의 담뱃세를 올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면 거의 들어맞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연맹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 약 1000만명의 '비소비지출'이 늘어나 서민소비는 감소하고, 물가상승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호주, 한·캐나다 FTA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의결에 따라 양국 FTA 비준 및 발효 지연으로 비롯될 수 있었던 우리 업계의 피해 우려도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왔다.

국회는 레바논과 남수단,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레바논의 동맹부대(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와 남수단 한빛부대(국제연합 남수단임무단·UNMISS), 소말리아 청해부대,

UAE 아크부대는 내년 12월말까지 현지에 주둔하게 된다.

또 '일본 내 혐한(嫌韓) 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결의안은 "일본 내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혐한 시위가 재일 동포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나 반인륜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가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와 유엔-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근절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과 국제연대 강화 등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준법감시심의필(인제14001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버전용 무배당 SH 실버암공제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 ✓ 나이가 많아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 없으셨던 분
- ✓ 고혈압 및 당뇨 때문에 보험 가입 못하셨던 분
- ✓ 부모님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바라는 모든 자녀분
- ✓ 자식에게 암 치료 등으로 부담주기 싫으신 분
- ✓ 기존 암보험이 있으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

Sh 수협보험